

국힘 지지·트럼프 동경 늘어…광주 ‘이대남’ 보수화 왜?

광주일보 여론조사…18~29세 국힘 지지 16% 세대간 온도차 뚜렷
숯폼 등 자극적 미디어에 고착화…“정치권, 박탈감 해소 노력 필요”

‘민주화의 성지’로 불리며 전통적으로 진보 색채가 짙은 광주·전남 지역에서 10~20대 남성들 중심으로 이념적 보수화 경향이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

유튜브 등 뉴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자극적인 콘텐츠 소비가 이들의 성향 변화를 부추기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와 광주·전남 행정통합 국면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지역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광주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광주·전남 통합단체장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이같은 기류를 수치로 증명한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견고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세 속에서도 18~29세 청년층의 표심 변화가 심상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은 6.9%를 기록한 가운데 만18~29세 연령대에서는 16.0%의 지지를 보였다. 이는 전체 평균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치로, 지역 내 청년층 사이에서 국민의힘 지지세가 확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민의힘 지지 성별 역시 남성이 10.1%로 여성(3.8%)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청년층의 ‘탈(脫) 민주당’ 경향은 더욱 두드러진다. 40대(5.3%), 50대(3.6%), 60대(3.9%) 등 중장년층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자릿수 초반에 머물고 있는 반면, 20대에서는 16%까지 치솟으며 세대 간 뚜렷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특히 이들 세대는 ‘내일이 통합단체장 선거일이 라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15.3%가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해 실제 투표의 향에서도 두 자릿수의 견고한 지지세를 증명했다. 18~29세의 국민의힘 후보 투표 의향 수치 역시 전체 평균인 6.0%를 크게 웃도는 결과다.

주목할 점은 성별에 따른 ‘이념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다.

통합단체장 적합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한 20대 남성은 7.5%로 여성(4.5%)보다 높았다. 이는 젊은 남성층의 표심이 기존의 지역 정서와

는 다른 양상으로 흐르고 있음을 시사한다.

교육계에서는 이런 변화가 피부로 와닿는다고 입을 모은다.

서부원 살레시오고 교사는 자신의 저서 등을 통해 우경화 현상이 20대를 넘어 10대 교실로까지 빠르게 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부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동경하거나, 5·18 민주화운동과 페미니즘 등에 대한 조롱을 하나의 ‘놀이 문화’처럼 소비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광주의 한 고교 졸업식 축하 영상에 극우 성향 유튜브가 등장해 논란이 일거나, 학교 축제에서 5·18과 독립운동을 ‘가장 의미 없는 운동’의 선택지로 제시하는 퀴즈가 출제된 사례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선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는 단면으로 해석된다.

학생들의 정치관이 깊어 있는 고졸보다는 숯폼(Short-form) 콘텐츠 등 자극적인 미디어에 의해 형성되고 고착화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단순히 ‘젊은 세대의 반향’이나 ‘일시적 보수화’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성 정치권이 청년 남성들의 현실적 고민과 박탈감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 데서 원인을 찾았다.

지 교수는 “정치권이 20대 남성이 처한 현실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면서, 현 집권 세력과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누적된 결과”라며 “단순히 세대나 집단의 문제로 낙인찍기보다는 그들의 목소리가 제도권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표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광주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광주시와 전남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5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통신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응답률은 7.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정준호 “KT 본사, 전남광주특별시로 이전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광주 북구 갑)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AI·디지털·에너지 대전환을 이끌 초광역 거점으로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에 KT 본사를 이전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정 의원은 KT가 민영화된 기업임에도 국가기간 통신망 운영과 재난 통신,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준공공기관에 버금가는 국가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KT는 자회사를 포함해 서울 종로와 경기 성남 등 수도권에만 74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KT와 같은 상징적 기업이 앞장서 이전해야 한다”며 “통신과 데이터 산업은 수도권 집중이 필수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과밀화로 인한 부지 비용과 전력비 상승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광주 지역이 국가 AI 집적단지와 데이터 센터,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KT의 미래 핵심 사업인 클라우드와 스마트 시티 구현에 가장 부합하는 입지라는 설명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민주 최고위 화기애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 두 번째)와 이언주 최고위원(왼쪽 첫 번째)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의 도중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지선부터 선거 연령 16세로 낮추자”

국힘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3대 특검 도입·영수회담 요청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 ‘더불어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3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데 힘을 다 쓸 아붓고 있다. 국회가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다”고 규정했다.

특히 여당이 주도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에 대해 “6개월 동안 먼지 떨어 아당을 털어냈지만,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이었다”며 “자신을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지방선거까지 내란 물의를 이어가겠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제라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2차 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를 철폐하고 검찰 해체 시도를 중지하라”면서 “비리를 알고도 덮은 김현지 부속 실장과 이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까지 모두 수사해야 하는 사건이다”고 강조했다.

또 장 대표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자”며 이 대통령에게 영수 회담을 요청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며 “단순히 정책 실패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해체하고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시장 경제는 붕괴하고 민생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25% 재인상’ 언급에 대해선 “국회의 비준 지연을 이유로 댔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며 “쿠광 사태가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됐고,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방 통과 등 일련의 흐름이 복합돼 관세 압박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 대표는 ‘정치 개혁’ 의제로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자고 제안,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도록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발의

혁신당, 사회권 보장·정치 개혁…소득당, 산업혁신 등 3대 원칙 제시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이 4일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양 당은 특별법안에 전남광주 통합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혁신당은 특별법안에서 ‘사회권 보장’과 ‘정치 개혁’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통합특별시를 기후위기와 산업구조 전환을 선도하는 ‘미래전환도시’로 규정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와 재생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집중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주거, 의료, 돌봄, 교육, 노동 등 시민의 보편적 사회권을 법적 권리로 명시해 행정통합 효과를 제감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정치개혁 분야에서는 시의회 내 비례대표 의원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초의회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아 지역 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또한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난개발 조장 특례를 과감히 삭제하거나 보완해 환경성과 공익성을 강화했다.

소득당은 ‘산업혁신·기반사회·민주분권’을 통합

의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첨단산업 투자 수익을 주민에게 직접 평등하게 배당하는 ‘산업혁신이익 공유기금’ 조성을 골자로 하며,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나누는 ‘햇빛바람연금’의 법적 토대도 마련했다.

기반사회 정책으로는 전남도가 선도해온 농어촌 및 출생기초소득에 대해 국비 80% 지원을 의무화하고, 전남권 국립의대 설치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강화를 명문화했다. 더불어 국무총리 산하 지 위원위원회를 시민 주도 기구로 전환하고,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등의 문턱을 대폭 낮춰 특별시장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뒀다.

정치권에서는 두 법안이 같은 날 발의됨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일괄 상정돼 기존에 발의된 특별법과 함께 통합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협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